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협력

- 3 <권두논문> 한중 문화 교류에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니우린제(牛林杰) (중국 산둥대학교)
- 6 중 · 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 (건국대학교 조교수)
- 14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 25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 · 일 · 러 · 한의 행태분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 (건국대학교 조교수)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은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쎬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

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

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인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

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중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형태분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 km²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²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권두논문〉

한중 문화 교류에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니우린제(牛林杰) (중국 산둥대학교)

한중 수교 이래로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양국 문화의 유사성과 보완성은 교류, 협력 과정에서 잘 나타나면서 ‘한풍(汉风)’과 ‘한류(韩流)’로 이어져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중 우호 협력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역사 인식문제와 문화 귀속문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등의 문제로 양국 국민들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이 한중 관계의 주된 흐름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중 우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요인들은 정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 분야에서 야기된 것으로 현대 민족국가에 대한 이해에 이견이 존재하고 맹목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다. 최근, 양국 국민들의 상호 감정이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악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빠른 발달로 인해 양국 간에 발생하는 마찰과 오해들은 상상을 초월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일부 문제들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한중 양국은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상호 의존, 공동 발전이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포용을 강화하여 굳건한 상호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확대하고 이해를 강화하며 민간 교류를 심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양국 간의 인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양국의 상호 호혜, 이해 심화, 협력 강화를 위한 Win-Win의 조치이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인문 교류 및 협력은 양국 사회, 문화 각 영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인문 교류의 내용과 형식을 확대 및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인문 교류의 영역과 공간을 확대하고, 그 방법과 구조를 강

화시켜야 한다.

또한 양국은 다양한 형식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 교류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문학, 철학, 종교, 예술, 음악, 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교류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중 문화 교류와 협력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협력 사업의 통합 및 진행할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교류를 진행하여,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기한다.

한중문화 공동연구 위원회의 설립

한중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하며 풍부한 현대 문화를 만들어 냈다. 한중문화 공동연구 위원회의 설립은 양국의 정확한 역사 인식, 공동 문화 계승의 발굴, 양국 국민 간의 문화 소통 및 이해 능력제고, 미래를 향한 문화 및 가치관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 연구위원회는 관련 영역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양국 국민이 객관적인 이해와 공정한 인식으로 상대방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양국 매스컴 간의 교류 및 협력 체계 강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양국 매스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양국의 보도 매체, 그 형태가 지면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매스컴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전제하에 매스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사실만을 보도하여 보도의 진실성, 객관성,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허위 보도, 부풀리기 보도, 악의적 조작 보도 등 양국 관계에 불리한 보도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편협한 민족주의 선전, 근거 없는 선전도 최대한 피하고 인위적인 이유로 양국 국민 간의 우호 분위기가 악화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이에 매스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심포지엄, 연찬회, 공동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국 매스컴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교육분야의 협력 강화

한중 양국은 교육 정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교류, 학교 공동 설립 등의 교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상대 국가에서 유학하는 자국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에 발맞춰 유학생 장학금 정원을 늘리고,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양국 유학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유학생 중개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학 시장을 규범화시키며 각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민간교류의 강화 및 민간단체의 기능 발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한중 간의 불화합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중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민간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민간기구, 학술 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 저자 약력

■ 니우린제(牛林杰)

現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 학장. 중국 정부에 의하여 북한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김형직 사범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

목 차

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
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
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
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
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 (건국대학교 조교수)

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

-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은 관련국 간에 평화적 해결방식이 모색되어 갈등해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음.
- 냉전와해 직후 일부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의 과거는 아시아의 미래”라고 예측하거나, 혹은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근거로 근래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결국 양국 간 갈등(혹은 전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영토분쟁이 시간에 비례하여 강화된다”라는 명제를 제시한 해스너(Ron E. Hassner)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임.
- 이들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작금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음.

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 유럽에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 국민국가체제가 성립되고 난 후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풍미하기 전까지는 서양의 동양침탈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은 없었음.

- 그 이전인 1567년 베이징에 도착한 두 명의 코사크족이 중국황제와의 만남을 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을 뿐, 러시아인들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우랄산맥과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 연안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무르 분지에 진출한 후에 네르친스크라는 마을을 세우고 모피거래를 위한 교역소와 요새를 설치하였음.
- 1670~1680년대에 발발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은 결국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귀결됨.
- 이는 근대적 의미의 국경선을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대략적인 경계지역을 규정된 것으로서, 지도상의 정확한 구분선이 아니라 산맥과 같은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적인 영유권 분리를 이루는 정도였음.
- 이로부터 중국의 영토는 1세기 반가량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음.
- 서세동점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세기 중반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태평천국의 난에 의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졌음을 타, 러시아는 아무르 분지에 대한 식민지배를 강화하였고, 이전에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중국의 영해로 규정되었던 오호츠크 해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음.
- 1850년대까지는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아무르 분지에 대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확립되었고, 저항할 여유가 없었던 중국을 상대로 보다 많은 것을 강탈할 수 있게 된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확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 그 결과로 중국은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한반도 북쪽 바다와 중국영토, 그리고 우수리 강이 만나는 지점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음.
- 그 후 일본이 아시아대륙을 침탈함에 따라 아무르 분지와 우수리 강이 사실상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경계가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중국은 1912년 공화국으로 체제를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더 이상 북동쪽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음.
- 러시아혁명 이후 1919년 소비에트 정권의 외상 카라한은 과거 러시아 황제가 강탈했던 중국 내의 모든 영토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포기한다는 소련 정부의 입장을 선언했음.
- ‘카라한 선언’ 당시 소련이 포기한 영토의 상당 부분은 새로 수립된 소비에트연방의 통제를 벗어난 반혁명세력(백군)의 지배하에 있었고, 얼마

**미·중 간 갈등과
동아시아지역
해양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러 간 영토분쟁
해결사례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중·러 간 영토분쟁의
핵심에는 19세기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과
스탈린 격하 이후
이념갈등이 자리잡고
있어...**

- 지나지 않아 혁명세력의 일시적인 열세가 만회되자 소련은 카라한 선언을 철회하였음.
- 중국의 약화로 인해 중·러 간 국경하천의 중국 측 제방에 이르는 소련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중국 측의 이의제기가 없는 틈에, 소련은 강내의 모든 섬을 차지해 버렸음. 이로 인해 소련에 대해 중국인들이 일시적으로 가졌던 호감은 배신감으로 돌변하였음.
- 마침내 중국은 내전을 끝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음.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절박하게 필요로 하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연대의 유일한 돌파구였던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음.
- 말하자면 잠자는 사자였던 중국은 다시 힘을 얻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임. 중국이 힘을 회복하면, 과거에 당하였던 것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음.

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

- 양국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었고, 영토분쟁은 주로 19세기에 양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기인한 것이었음. 이로 인해 중국이 공산혁명 이후 정권을 안정시키고 점차 국력을 회복하면서 1960년대에 양국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음.
- 냉전 중이던 1969년 우수리 강의 전바오섬(다만스키섬)에서 대치한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전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음.
- 1969년 8월 신장의 중·소국경 서부에서 양국이 대립했을 때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음.
- 과거의 불평등 조약에 기인한 양국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었음.
- 흐루시초프가 1956년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인 이후 중·소 간에는 이념분쟁이 심화되었음.
- 양국의 불협화음은 국내적으로 사회주의를 수립하는데 적용할 방법 및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음.
- 중국 내 지도층의 갈등 속에서 마오쩌둥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관계를 활용한 측면도 있었음.

- 이에 더해, 어떤 이념이 소속원들로 하여금 단일 권위적 리더십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적 운동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역설적이게도 소속원들 간에 갈등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월트(Stephen Walt)의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말하자면, 중국과 소련은 서로를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로 비난하며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투는 형국에 놓였던 것임.
- 이와 같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1969년 발생한 중·소의 전바오섬 충돌사건은 3,000명가량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양국은 긴급회담을 통해 전면전을 겨우 피할 수 있었음.
 - 중·소의 갈등은 1971년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미·중이 소련에 대항하여 연합하는 세력구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음.
- 이런 가운데 중·소 양국 간 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979년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그나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음.
 - 이후 중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내걸었음: ①중국 국경과 몽골에 배치된 소련의 대규모 병력 철수, ②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지, ③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한 소련의 지지 철회

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

- 중국은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을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했음. 이때 돌파구가 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고르바초프였음.
 -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 이념이 지닌 분열적 성질 때문이라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으로 표방된 ‘신사고’는 동서 간에서만뿐만이 아니라 중·러 간에서도 이념적 경쟁을 종식시키고, 영토분쟁의 장기적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고르바초프는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중국 국경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과 몽골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의 철회 등 3가지 조건 중 일부에 대해 타협의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음.
 - 고르바초프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떼어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었음.
 - 1979년 미·중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소련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중·러 간 이념적
경쟁을 종식시키고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초석을
마련...**

**분쟁 중인 영토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양보와
중국의 타협적 자세에
힘입어 현재 중·러 간
국경분쟁은 모두
해소된 상태...**

-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었음.
- 이러한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 곤경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대는 고르바초프와 같은 인물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임.
 - 고르바초프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소련의 입지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임.
 - 아무리 국제적, 국내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의 유연하고 타협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중·러 간 국경문제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임.
-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분쟁 중인 영토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식적 국경은 강의 간천(幹川, main stream)을 따라 규정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음.
- 이는 러시아가 중국 측 간천의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천섬에 대한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차후 중·러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상호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음.
 - 과거에 카라한(그리고 레닌)은 러시아가 침탈한 영토를 중국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함으로써 중국의 원한을 샀지만, 고르바초프가 택한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매우 긍정적 조치였음.
- 이어 1989년 5월 중국과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였음.
-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주요 영토분쟁의 해결을 향한 상당한 진전이 이미 이루어졌음.
 - 1989년 10월 중국은 첫 번째 양보조치로서 모든 영토분쟁의 ‘포괄적 일괄타결’이라는 이전의 요구를 철회하고, 지역별로 특정의 개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유연성을 발휘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분쟁대상이 되었던 두 개의 섬을 제외하는 합의에 서명했음. 이처럼 중국의 타협적 자세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고, 마침내 1991년 5월 첸지첸 중국 외교부장과 베스메르트니히 러시아 외상이 동부국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음.
-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이미 합의된 협정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양국은 지속적으로 국경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그 결과가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결된 ‘중·러 동쪽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블라디보스토크 조약)’에 의해 공식화되었음.

- 양국의 4,300km에 이르는 육상국경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경계획정이 완전히 마무리지어진 것은 2008년 7월 21일에 이르러서였음. 현재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분쟁은 모두 해소된 상태임.

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

- 중·러 간 영토분쟁의 타결과정에서 양국은 호혜의 원칙을 준수했음.
 - 이는 구체적으로 양국이 아주 엄격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각각의 구체적 사안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50:50원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나타났음.
- 분할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협상과정에서는 ‘공동사용’이라는 방식도 최종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음.
 - 50:50 원칙이라는 것은 분쟁지역을 반드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법적 해결책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다(give and take) 정치적 타협을 추구했음을 의미함.
- 사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양을 침탈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근대 국제법 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국경하천들 중 다수는 러시아의 관할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했음. 불평등 조약도 조약이기 때문임.
 - 러시아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중국에 수백 개의 섬을 양보했음.
 - 이러한 ‘윈-윈’의 이미지는 중국 측의 반발과 민족주의적 감정을 억제시키고 양국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했음.

영토분쟁의 타결에 있어서 중·러 양국은 호혜의 원칙을 준수했고 분할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동사용에 합의...

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해결사례는 그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사건으로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고 있음.
 - 첫째,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과정은 불평등 조약, 제국주의 침탈 등 역사 문제의 해결과 그 궤를 같이했음. 중국은 국력이 쇠퇴했을 때 빼앗겼던 것을 고르바초프 이후 대체로 절반 정도는 러시아로부터 되찾았는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역사적 한(恨)을 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 이처럼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는 같이 얽혀 있는 것이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든 것임.

**역사의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하면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 둘째, 중·러 사례는 정치적 리더십의 지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인간임을 자각하는 지도자들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민중들의 자각이 필수적임. 고르바초프는 과거 중·러관계를 특징지었던 ‘부정적 상호주의’를 ‘긍정적 상호주의’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음.
 - 셋째,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원용되었던 50:50원칙으로 표현되는 공정성, 합리성의 문제는 영토 문제의 해결에 중요했음.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동사용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기술적, 법적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 아니라, 정치적 유연성 혹은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임.
 - 넷째, 중·러 영토분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역설 중의 하나는 양국이 영토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의 분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양국의 국경에 분쟁의 원인이 될 만한 수많은 발화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분쟁지역의 수가 매우 많아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었고 ‘긍정적 상호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임.
-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음. 마르크스(Karl Marx)가 초기저작에서 설파했듯이,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임.
-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혹은 구조)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님. 오히려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또한 가진 것이 인간이며 정치지도자들임.
 -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 악(evil)과 비극(tragedy),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
- 작금의 동아시아 상황은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 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임.

참고문헌

- 윤태룡, 2013,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 그 타협의 원칙과 독도,” 「민족연구」 통권 제53호(2013), 46-68쪽.
- Fravel, M. Taylor, 2008,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ssner, Ron E., 2006/07, “The Path to Intractability: Time and the Entrenchment of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31, No.3(Winter 2006/07).
- Iwashita, Akihiro, 2005, “An Inquiry for New Thinking on the Border Dispute: Backgrounds of “Historic Success” for the Sino-Russian Negotiations,” in Akihiro Iwashita, ed.,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he 21st Century: Partners in the “Community of Asia,”* Vol.1 Crossroads in Northeast Asia,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 Maxwell, Neville, 2007, “How the Sino-Russian Boundary Conflict Was Finally Settled: From Nerchinsk 1689 to Vladivostok 2005 via Zhenbao Island 1969,” *Critical Asian Studies* 39:2(2007), pp.229-253.
- Robinson, Thomas W., 1972,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Background, Development, and the March 1969 Clash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6, No.4(December 1972).
- Rozman, Gilbert, 2010, *Chinese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 Palgrave Macmillan.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Jianwei, 2003, “Territorial Disputes and Asian Security,”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380-423.
- Yoon, Tae-Ryong, 2008, “Learning to Cooperate Not to Cooperate: Bargaining for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Asian Perspective*, Vol.32, No.2(Summer 2008).

❖ 저자 약력

■ 윤태룡

現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고려대 영어영문학과(학사)/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미켈럼비아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국제정치 안보분야)를 취득함.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연구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HK연구교수를 역임함. 주요 연구분야는 동맹이론, 한미일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영토분쟁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Balance-of-Fear Theory and Korea-Japan-U.S. Relations, 1945-1953”, “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등이 있음.

목 차

- 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 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는 형제
- 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
- 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
 - 가. 주요 회담 내용
 - 나. 각국의 속내
 - 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
- 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가. 3자 회담의 의의
 -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 전후 국민국가 출범과 함께 인도, 미얀마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동맹운동의 주도 국가였음.
 - 서구 식민화를 자발적으로 치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비동맹중립외교노선의 필요성 확산
 -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사이에서 상호 갈등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확산
 -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등 강대국에 끼어 있는 약소국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중립적 외교 전략이 필요했음.
-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배경과 내용
 - 인도와 중국 간 티베트 영유권 문제 해결 협상(1953.12~1954.4) 당시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석이 제안함.
 - “중국과 인도의 티베트 지역에 대한 무역과 교섭 협정”으로 합의, 이후 이 원칙은 양국 외교정책의 기초로 채택됨.
 - 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미얀마도 외교관계 기초로 본 원칙을 채택함.
 -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공존 등을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함.
- 평화공존 5원칙의 부침(浮沈)
 - 중국과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과 관련한 영토분쟁으로 1962년 전쟁을 치렀고, 지난 4월에도 동 지역의 실질통제선과 관련하여 약 3주간 각군이 대치했음.
 - 중국과 미얀마는 국민당 잔당의 미얀마 유입과 아편 재배, 1950년대 미얀마 동북부지역 영토 분쟁, 1967년 문화혁명 여파로 인한 미얀마 내란 발생, 미얀마 소수종족 분리운동에 따른 내전 발생과 중국의 무관심 등 초국적 의제가 산재함.

- 인도와 미얀마는 냉전기까지 평화공존 5원칙을 유지했으나 1988년 미얀마 신군부 집권 이후 1992년 인도가 동방정책을 선택하기까지 적대적 관계 유지
-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변화한 환경 속에서 평화공존 5원칙의 가치와 모순을 분석하고, 미얀마와 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외교 전략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거대 국가 속에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가 강화되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눈 형제

- 미얀마 정신 및 물질문명의 절반은 중국임.
 - 미얀마는 중국 유교사상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왕조시기부터 인도와 함께 중국의 영향권하에서 물질과 정신문명을 발전시켜 왔음.
 -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침략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사례(1287)가 발생했을 정도로 미얀마는 중국을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해 왔음.
 - 17~19세기에도 중국의 왕조 교체, 왕위 찬탈전 등 내부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얀마 동북부지역으로 유민 발생 및 국지전의 원인이 되었음.
- 빠옥포(Pauk Phaw) 관계의 설립
 - 미얀마는 제3세계 국가 중 마오쩌둥 정권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임.
 - 저우언라이 주석의 미얀마 방문(1954) 당시 양자관계는 ‘형제, 혈맹’을 의미하는 빠옥포로 정의됐고, 이후 이 용어는 두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 고유명사로 고착됨.
 - 1978년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산혁명 수출을 중단하기까지 중국은 ‘당대 당 전략’으로 미얀마 내 공산당을 지원함.
 - 미얀마는 비동맹중립노선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여 중국과 직접적인 물리적 마찰을 피해 왔음.
- 등거리 외교에서 밀월관계로 발전
 - 1988년 이전까지 미얀마는 중국이 협조 또는 지지를 구하는 국제적 사안에 중립적 원칙에 근거한 등거리 외교를 고수함.
 - 미얀마 신군부 집권(1988.9.18)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세계가 민주화 지원,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대 미얀마 제재 시행
 -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정통성을 상실한 미얀마 신군부는 중국과 긴밀한

냉전기 중 중국, 인도, 미얀마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공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 5원칙을 채택...

**미얀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연동하여 중립노선의
토대 위에
헤징전략을 통해
외교적 국익을
제고하려는 입장으로
선회**

- 관계를 형성하여 정권 퇴진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시도함.
-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하여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미얀마와 독점적 경제교류를 통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환경을 구축함.
 - 나아가 중국은 미얀마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남서실크로드의 부활과 인도양에서 한반도 일대 태평양을 잇는 해상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새로운 관계의 모색
- 2007년 1월, 미얀마 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뒤 왕광야(王光亞) 중국 대사는 미얀마 내정을 직접 언급했고, 2월에도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는 등 양자 관계의 이상기류가 포착됨.
 - 2008년 미얀마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서 회합을 하자 미얀마는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 및 송유관 공사를 중단하는 태업을 벌임.
 - 2009년, 2010년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은 양국 간 경제협력 이외에도 미얀마가 제안한 국경지역 소수종족 소탕 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
 - 미얀마 신정부의 출범 배경(줄고, JPI 정책포럼 2012-1 참조)에서도 드러났듯이 미얀마 국민뿐 아니라 군부 실세까지 중국 종속구도에 대한 우려와 반중국인 정서가 확산되었음.
 - 중국의 연성외교, 정부 대 정부 간 대화 채널, 군사적·경제적 지원대로만 인식하는 중국의 대 미얀마 전략은 미얀마의 반발을 야기했음.
- 재설정되는 양자 관계
- 2010년 총선 이전, 중국은 자국의 전철을 밟아 미얀마가 경제발전을 통하여 실적에 의한 정통성(performance 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미얀마 군부에게 조언함.
 - 위의 경우 중국은 양자 간 경제교류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미얀마의 중국 의존도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
 - 예상과 달리 미얀마 신정부는 정치범 석방, 인권 개선, 자유화 조치 등 정치 분야의 개혁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서방세계와 관계 개선을 시도함.
 -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연동하여 미얀마는 중립노선의 토대 위에 헤징전략을 통해 외교적 국익을 제고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함.
 - 군사정부 시기와 달리 미얀마는 중국기업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투자환경을 철회하고, 밋송(Myitsone)댐 건설 중단, 렛빠따웅(Letpataung)

구리광산 투자 조건 재설정 등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 2012/13년 기준, 중국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FDI)는 4억 700만 달러로 1년 전(82억 7천만 달러)에 비해 급감했고, 미얀마 내 주요 투자 입찰 건에서 중국기업은 단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함.

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

-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성공적인 개혁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다자화하고, 자유화 조치를 통해 서방세계의 지도자 방문과 지속적인 지지를 유도함.
 - 중국은 정부 대 정부 관계에만 천착하여 미얀마의 급진적 변화에 능동적 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양자 관계는 일정 수준 후퇴함.
 - 미얀마의 개혁은 특히 아세안의 지지를 이끌어 2014년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으로 선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2012년 캄보디아 사례처럼 중국의 영향력하에서는 동남아 약소국이 아세안 의장국 고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됨.
-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무난히 수행 중인 미얀마
 - 지난 50년간 국제사회에서 은둔한 경력으로 인해 국제정서에 밝지 못하고, 장기간 군부집권으로 인해 국제행사 경험 전무, 행정력 부재 등으로 의장국 역할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 2011년 미얀마와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등 여전히 미얀마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취급하는 경향도 관측됨.
 - 위와 같은 우려에도 지난 5월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Summit)에서 미얀마는 의장국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아세안의 지지를 유도함.
 -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지역의 긴장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이외에도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태국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원칙 존중,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재확인을 통한 긴장완화 노력, 중국-일본 간 동중국해 분쟁, 역내 사이버범죄, 인신 밀매,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거침.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이외 국가(군)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얀마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아세안 내 입지를 강화

**회담에서는 3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고수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 역설**

-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아세안 차원의 다자적 해결보다 분쟁 당사국의 양자 관계로 해결하려는 원안을 고수함.
 - 상기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이전 미얀마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됨.
 -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이외 국가(군)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얀마는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아세안 내 입지를 강화함.
 - 미얀마가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지렛대로 활용하자 중국의 고립은 가중화되는 추세임.
 - 중국 일각에서는 대 미얀마 진출 및 외교전략 수정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중단된 밋송댐 건설 재개 주장 등 큰 틀에서 정경분리 및 경제우선원칙을 고수함.
 - 중국은 가스관 및 송유관 안전 문제로 미얀마 서부 해상지역 해군 주둔 또는 접안 등 미얀마와 군사협력을 시도했으나, 이는 미얀마의 대중 반발 심리를 강화함.

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

가. 주요 회담 내용

- 평화공존 5원칙의 고수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함.
 - 시진핑(習近平) 주석, 무커지(Pranab Mukherjee) 인도 대통령, 페잉쎄인 미얀마 대통령은 6월 28일 축전 교환을 통해 평화공존 5원칙 제정 60주년을 축하하며 3국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우호교류의 해로 지정함.
 - 시 주석은 미국과 이라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한 국가가 혼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국은 국력이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패권(hegemony)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함.
 - 시 주석은 패권이나 군사화는 중국인의 유전자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중국은 중국의 이익, 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함.
 -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 중국은 모든 국가가 개방, 투명, 평등한 질서 속에서 아태지역의 안보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새로운 건축이라고 명명함.

- 경제협력을 통한 통합경제권 구축 필요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안사리 인도 부통령, 떼잉쎬인 미얀마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공존 5원칙의 토대 위에 BCIM 경제회랑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부활 등 경제현안 협력, 평화적 협상을 통한 국경분쟁의 해결책 모색 등을 논의함.
 - 리 총리는 미얀마와 가스관, 광업개발, 항구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순조롭게 시행 및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인도와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경제국으로서 발전전략과 거대한 협력의 잠재성을 공유하고, 국경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희망함.

※ BCIM(Bangladesh, China, India, Myanmar) 경제회랑: 1999년 8월, 중국 윈난 성 성도 쿤밍에서 개최된 4개국 간 트랙 2 회담으로 해당 4개국 간 무역, 관광,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포함한 경제교류와 마약과 무기 밀매, 불법 이주 등 초국적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BCIM 포럼의 경제분야 협력 의제이다. 각국의 싱크탱크 중심으로 연례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강화, 현안에 대한 원활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이 포럼을 통해 남서실크로드의 부활을 꿈꾼다.



*미얀마의 친미화로
중국이 미얀마를
교두보로 설정하여
추진해 온 ‘중국산
진주목걸이 전략’,
인도양에서
한반도까지 있는
해상권 장악 전략
등에 타격이 불가피*

나. 각국의 속내

- 중국
 - 미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인도와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및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됨.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위협론을 인지하며 아세안 차원의 집단적 대응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중국은 불순한 의도가 없다는 외교정책을 전시함.
 - 미얀마 신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에 따라 중국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소멸될 위기에 봉착했고,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급진전되자 중국의 위기의식은 고취됨.

**미얀마는 최근
소원해진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혈맹관계의 연속성을
과시**

- 일례로 5월 28일, 미 육사 졸업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버마(미얀마)가 성공하면 미국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새 파트너를 얻게 된다.”고 하여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미얀마를 중요한 행위자로 지목함.
- 미얀마의 친미화는 일국 차원을 넘어 중국이 미얀마를 교두보로 설정하여 추진해 온 ‘중국산 진주목걸이 전략’, 인도양에서 한반도까지 잇는 해상권 장악 전략 등 군사 및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함.
- 중국은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를 선제적으로 포섭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실시될 아세안정상회담,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미얀마의 유화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음.
- 국가 대 국가 관계로는 미얀마와 경제교류 회복,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관계 복원을 희망함.

○ 인도

- 지난 6월 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인의 연장선 상에서 중국과 긴장관계 청산 및 경제 교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금번 회담은 연말 시 주석의 방인을 대비한 외교장으로 활용함.
- 모디(Narendra Modi) 신임 총리는 구라자트 주지사 재임 당시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목한 인물로, 중국의 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기술, 규모, 속도 면에서 경제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
- 동방정책 계승을 위해 미얀마와 지속적인 관계 증진 및 경제적 협력 필요성 증대
- 중국 및 미얀마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력 증대를 도모하여 중국과 경쟁관계 형성 및 동아시아세계에 영향력 확대

○ 미얀마

- 전통적으로 비동맹중립외교를 표방하는 외교정책상 주권 보장과 상호 불가침원칙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본 원칙을 옹호함.
- 중국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 국가로 선택해 왔으나 최근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일정 수준 회복하는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혈맹관계의 연속성을 전시함.
- 각종 밀매, 인신매매, 소수종족 무장반군 등 중국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도하여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중국의 대 미얀마 태도 변화를 유도함.
- 중국, 인도 등 주변 강대국과의 동등한 외교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제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미국의 대 미얀마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는 전시효과를 지향함.
- 인도와는 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미얀마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지 않도록 인도의 견제와 균형을 유도함.

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

- 평화공존 5원칙과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 본 원칙은 미국과 소련연방 등 양극체제를 돌파하기 위한 제3세계의 자구책으로 21세기 지역질서와 상충되는 면모가 다수 발견됨.
 - 중국은 타국과 충돌 금지, 국제적 공조 추구, 평화공존 5원칙 고수, 낮은 수준의 정치 협력 등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음. 해양안보 측면에서 향후 50년을 목표로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의 해상권 장악을 목표로 설정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에서 소위 ‘중국기회론’을 제공하며 우호 관계를 형성했으나 동남아는 중국의 행태를 기회와 위기 등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함.
 - ‘G2 시대’를 맞아 인도와 미얀마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상황과 조건에 따른 편승 및 균형전략으로 국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
- 평화공존 5원칙의 수정 필요성
 -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 지속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 부재,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 및 주변국(중국, 태국)으로 유입
 - 상호 불가침: 중국과 대륙부동남아가 추진 중인 메콩광역권(GMS) 개발이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진행되는 등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 간 경제교류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
 - 상호 불간섭: 이론적으로 3국 간 원칙을 고수할 수 있지만, 미얀마의 자유화 조치 및 인권 강화, 향후 체제변동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미비.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국가로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평등과 상호 이익: 강성 및 연성권력 차원에서 해당 3개국은 비교 자체가 불가함. 해당 3국은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정경분리가 항상 주효하지는 않음.
 - 평화공존: 공동안보, 테러리즘 관리,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법치화 등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서 달성할 수 없는 미완의 과제이며, 평화공존을 위해 주권이나 국익 일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평화공존 5원칙은
냉전 중
미소양극체제를
돌파하기 위한
제3세계의
자구책이었으나
21세기 지역질서와는
상충되는 면모가
다수 발견되어...**

평화공존 5원칙 발표**60주년 기념****정상회담은 중국의****역내 위상을****확인하고, 미얀마의****가치를 재확인하며,****향후 과제를 확인할 수****있었던 기회****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가. 3자 회담의 의의**

- 지역 내 중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평화공존 5원칙을 매개로 정상급 회담을 개최했으나 중국은 지역 내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입증했음.
 - 중국은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회랑계획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해양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함.
 - 시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은 활발한 대외전략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잠재적으로 아태지역을 주도할 역량을 배양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관계는 ‘경찰국가’와 같은 미국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중국만의 연성전략을 전시함.

-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중국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미국의 대 동남아 약진은 중국의 상대적 퇴보를 의미하므로, 중국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사례처럼 경제적 지원을 불모로 동남아 내 영향력을 행사해 음.
 - 중국위협론이 가시화되자 아세안 내 친중국가는 감소했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 동남아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도 상호 물리력을 전시함에 따라 동남아국가의 안보딜레마 자극, 이에 따른 아세안 차원의 집단적 대응 필요성 제기

- 미얀마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미얀마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으나, 정치·경제적으로 미얀마는 중국의 속국화되는 추세였음.
 -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는 중국과 등거리 외교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은 축소되었음. 이는 미얀마가 중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했다는 점을 의미함.
 - 중국, 인도에 비해 미얀마는 약소국이지만 본 회담에서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미얀마가 두 국가의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하반기 개최 예정인 아세안정상회담,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의 지지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됨.
 - 위와 관련하여 이변이 없는 한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얀마와 관계 개선을 위해 현지 진출전략의 수정, 미얀마 야당과의 교류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지만, 평화공존 5원칙은 두 국가 관계 개선에 일정 수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최근 미국이 미얀마와의 경제교류를 포함하여 군사적 연대까지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 또는 쇠퇴시켜야만 지역 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 연말 방인이 예상되는 시 주석은 인도와 국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중국의 전략을 직시하고,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
 - 금년 들어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교의 공을 들이는 추세로 보이며,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 기념 회담과 시 주석의 방한, 시 주석의 연내 인도 방문 등도 중국의 아시아 외교 연장선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중국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통해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중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의 이탈을 통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특히 한국과 함께 대 일본 압박정책을 통해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아시아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함.
 - 한국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중국이 최근 갈등 관계를 겪은 일련의 국가들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국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외교 스펙트럼의 확장이 필요함.
 - 대 동남아 지원 규모를 참고했을 때, 한국은 중국, 일본을 초월할 수 없으므로 경제 분야 이외의 협력의제를 설정하고 관계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우리는 동남아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외교의
스펙트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필리핀도 미국의 안보벨트에 적극 동참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급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 테러리즘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한국도 동북아 외교전략보다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스펙트럼이 필요함.
- 아세안 관련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의 의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시각과 배려가 필요함.
- 동남아는 정치적으로 중국, 경제적으로 일본의 패권 장악에 잠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는바 한국이 모범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음.

○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는 한반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

- 미얀마를 교두보로 아시아 재진입 전략을 완성하려는 미국, 해양으로 뻗어 나가려는 중국,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인도 등 강대국의 이권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 헤징전략으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여 국익을 제고하려는 미얀마의 외교적 노력은 미·중·일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음.
- 적성국가로 분류되던 미얀마의 변화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으나 미얀마와 북한의 내부 사정은 상이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미얀마는 그들의 변화와 북한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두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함.

❖ 저자 약력

■ 장준영(張准榮)

現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한국외대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에 관한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함(2009). 미얀마 정치변동과 국가-사회관계, 동남아 국제관계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음.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목 차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 기존연구의 고찰
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
4. 분석과 논의
 - 가. 중국
 - 나. 일본
 - 다. 러시아
 - 라. 한국
5. 결론

1. 들어가는 말

- 일본은 독도에 대해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 러일전쟁 이후 1905년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1항을 애매하게 만들어 아전인수식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독도 문제가 조약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
 -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속적인 망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전략적 갈등유발로 판단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 전략으로 일관
 - 조용한 외교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된 1965년 한일어업조약의 기본조약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의 독도소유권을 인정한 독도밀약을 제외하더라도 독도 인권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의 빌미를 제공
 -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
 -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 이러한 조치는 협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를 어업부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독도 문제에 있어서 진전 없음.
-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배제한다는 선언을 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포하였지만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국제법적 논거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강화
 -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공세적 입장의 이유는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km²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²로 증가되어 세계 9위의 대국이 됨.

**우리의 고유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을 분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는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자세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여론의 반응에 의존하여 일본이 도발하면 반응하는 지속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대중요법식의 대응으로 일관
- 이어도의 관할권에 있어서 중국은 자국령 최동단 퉁다오에서 247km 그리고 우리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를 영두에 두고 인구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야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한중 간의 신경전이 고조됨.
- 우리의 고유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을 분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에 산재해왔던 영토분쟁에 대해서 주요국가의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략적으로 유효한 대책수립의 출발점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학계가 세계의 영토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찰할 기회를 가지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영토 및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기존연구의 고찰

- 우리나라에서 영유권 또는 영토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를 일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구분
 - 한국의 연구는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에 집중(김영수 2008; 최병학 2010)
 - 동아시아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도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김태준 2008; 최희식 2010)에 대한 개별사례 분석이나 유사 사례를 다수 포함하는 비교연구
 - 소수의 연구가 동아시아를 벗어난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분쟁(이극관 2011; 배진수 2012)을 소개
 - 독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주제로 부상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연구의 접근법은 역사·지리적 접근과 국제법적 접근의 두 가지로 분류

- 두 가지 접근법은 일견 다른 접근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본질적으로 유사한 접근
 - 일본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역사서의 기록과 고지도에 명기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 일본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반박
 - 이러한 접근법에 의한 연구 결과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본의 망언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¹⁾
-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대응과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한국이 제작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와 위치의 오류 등을 문제 삼아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
- 한국의 각종 지리서나 역사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의 혼돈 가능성과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반론을 제시(정갑용 주문배 2004, 36-39)
 - 독도를 둘러싼 한일의 상호대응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순환 논리에 빠져 갈등을 증폭하며 각종 지리서나 역사자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논리는 상대방 편찬한 관찬지도에 독도에 대한 표시나 표기가 누락되거나 틀린 표시를 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상대방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
-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접근에 말려들지 않고 일본에 맞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한국 학계가 주도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이 역사학에 기초
 -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국제법적 권원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배경에 있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고지도와 고문서 연구
-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영토주권을 인정받고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실효적 지배
- 국제법이라는 일반법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둘러싼 양국의 역사적 논쟁보다는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 확립을 보장하는 데 더 효과적
 -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법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영유권의 확보와 인정은 현실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힘의 정치를 국제법이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정치의 문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접근에
말려들지 않고 일본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충동로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9년부터

1995년까지 75년간에

걸친 기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영토 관련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건데이터 형식으로

수집

-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학적 접근이나 국제법적 접근과 동시에 국제 정치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과 관련된 영유권 분쟁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실증적이며 고증적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전개와 현실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 본 연구는 지난 100년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영유권 문제에 관련하여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자료를 분석하고 간략한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처해있는 정책적 위치를 고찰

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

-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
 -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충동로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9년부터 1995년까지 75년간에 걸친 기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영토 관련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건데이터 형식으로 수집
 -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영토관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challenger state)가 상대국가(target state)에 대해 의사표명 시점
 - 정확한 분석의 단위는 도전국가와 상대국가의 특정된 방향성을 고려한 양자관계(directed dyadic relationship)
 - 양자관계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영토의 현상유지에 변경을 의도하는 도전국가가 상대국가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외교 정책 행위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
-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아래의 규칙에 근거하였음.
 - 도전국가의 행위는 3가지의 선택으로 분류되는데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2)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3) 군사적 행위를 시작하는 경우
 - 도전국가가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와 군사적 행위를 시작하는 경우는 언제 해당 행위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 없이 정확함.
 - 문제는 도전국가가 영토적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선택을

의미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자료를 작성할 때 “12개월 원칙”을 적용

- 직전의 협상이나 군사적 행위가 종료되고 12개월이 지나는 동안 후속 조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전국가가 영토의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우로 데이터를 작성
 - “12개월 원칙”은 도전국가가 협상이나 군사적 행위를 개시할 때까지 계속 적용
- 현상유지 데이터는 월별자료로 작성되었지만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정부의 형태, 정부의 동맹관계, 국내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월별로 작성되기 어렵고 실제로 연도별 자료들이 많다는 점이 한계임.
- 본 연구논문에서는 전체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당사자 국가들인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제외하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포함.
 - Huth and Allee 데이터가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에 있어서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자료조사 과정에 오류
 -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도전국가이거나 상대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표본으로 포함된 4개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더욱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

영유권 갈등 데이터는 전체 6,572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도전국가가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가 4,370회(66%)이고, 협상을 시작한 경우가 1,782회(27%), 그리고 군사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가 390회(6%)

4. 분석과 논의

- Huth and Allee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일반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유권 갈등 데이터는 전체 6,572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도전국가가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가 4,370회(66%)이고, 협상을 시작한 경우가 1,782회(27%), 그리고 군사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가 390회(6%)
 - 자료가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군사적 분쟁의 발생은 실제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구체적 협상을 전개하는 경우도 소수임.
 - 영유권과 관련한 갈등은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문제제기에 그치고 상대방의 반응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국의 영토갈등
패턴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우,
식민지 종주국과
분쟁을 시작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1960년대 그리고
늦어도 1980년대까지
갈등이 해결됨**

가. 중국

- 중국은 고대부터 주변국과 많은 전쟁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사용해왔다고 할 정도로 국력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주변의 비대칭적인 국가나 세력을 무력수단을 통해 복속시킴으로써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형성(서상문 2013, 15)
 - 중국은 1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경분쟁을 경험해왔고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축적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60년의 기간 동안 군수지원과 군사지원을 포함하면 실제 교전행위는 총 15회, 분쟁까지 포함하면 총 23회의 영토분쟁과 분쟁해결의 과정을 경험(이동울 외 2008, 11)
 - 중국 정부는 러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과 국경 분쟁을 치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
- 중국이 도전국가로서 발생한 분쟁은 전체 19건이 발생
 - 일부 갈등은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국가와 상호관계로 인해 동일한 분쟁을 2개의 국가가 시차를 두고 당사국으로 조사됨.
 -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 제기한 영유권 문제를 인도가 승계하는 경우 또는 프랑스에 대해서 발생한 영유권 문제가 나중에 월남, 그리고 월남 패망 이후에는 월맹으로 이어져 분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
 - 중국은 러시아와 4,37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전체 국경의 97% 지역에서 국경을 획정하였지만 헤이샤쯔다오와 아파가이투주 등 일부 지역에서 국경을 획정하지 못함.
 - 인도와는 2,0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분쟁지역은 12만 5천 km²에 달하고 베트남과는 영토와 영해 그리고 남사군도에서 분쟁상태(경향신문 2004년 8월 13일)
 - 중국이 도전국가로 전개되는 전체 19건의 분쟁 중에서 1995년 기준으로 부탄, 베트남, 일본,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을 포함하여 전체 6곳이 분쟁 상태
 - 군사적으로 치열한 갈등을 유발한 사례는 베트남지역의 국경분쟁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기부터 지속되어 1932년부터 1995년까지 63년의 기간 동안 10회의 협상과 10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
 -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1919년부터 1962년까지 5회의 협상과 7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
 -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1919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쟁의 상당 부분이 초기에는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였고 31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평화로운 형태의 타결이 결실을 맺음.

- 중국의 영토갈등 패턴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우, 식민지 종주국과 분쟁을 시작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1960년대 그리고 늦어도 1980년대까지 갈등이 해결됨.

〈표 1〉 중국이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상대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07	아프가니스탄	1919/1	1963/3	45	3	-
108	부탄	1979/1	1995/8	20	9	-
109	영국	1919/1	1930/2	12	5	-
110	영국	1919/1	1984/1	65	6	-
111	영국/인도	1919/1	1962/4	48	5	7
112	영국/미얀마	1919/5	1960/1	44	15	5
113	프랑스	1919/1	1945/3	28	2	-
114	프랑스/월남/월맹	1932/6	1995/12	70	10	10
115	일본	1919/1	1945/11	31	2	6
116	일본	1951/1	1995/7	46	4	-
117	네팔	1949/1	1960/12	13	3	1
118	카자흐스탄	1993/4	1994/2	2	2	-
119	키르기스스탄	1993/4	1995/12	4	3	-
120	몽고(몽골)	1946/1	1962/11	18	1	2
121	파키스탄	1947/1	1962/2	16	1	-
122	포르투갈	1919/1	1975/6	57	3	1
123	소련(러시아)	1919/7	1995/12	81	31	4
124	소련	1948/3	1955/10	10	3	-
125	타지키스탄	1993/4	1995/12	4	2	1

-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국가들과는 1993년 4월을 시점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소

〈표 2〉 중국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27	프랑스/월남/월맹	1932/6	1995/5	62	13	1
129	인도	1963/4	1995/9	40	15	-
138	일본	1932/10	1937/7	9	2	7
144	말레이시아	1979/1	1995/11	19	5	-
152	네팔	1949/1	1960/12	13	3	-
154	필리핀	1971/1	1995/12	27	5	-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국가들과는 1993년 4월을 시점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소

**중국의 영유권 관련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근대
이후 가장 빈번하게
협상행위와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유권에 대하여
활발하게 압력과
교섭행위를 적용**

-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영유권 갈등의 특징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들 또는 식민지 시대에 해당지역을 점유했던 식민지 종주국과의 갈등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갈등
- 중국이 분쟁의 상대국가인 사례는 전체 6개가 보고되었고 일본과의 만주국 사례 그리고 네팔과의 국경 분쟁을 제외하면 월남,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현재에도 분쟁상태
 - 중국이 도전국가인 경우와 비교하면 중국에 대해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음.
 - 만주국과 관련한 중일 간의 분쟁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감행한 국가는 1959년 2월의 베트남이 유일한 사례
 -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경분쟁으로 일어난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979년 2월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는 중국이 주도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국경 및 영유권 분쟁에 있는 주변국가 중 누구도 군사적 수단에 의지하는 선택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 영유권 갈등을 경험하는 국가들 사이에 도전국가의 국력이 현격하게 낮은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보다는 협상에 의존
 - 도전국가의 국력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개연성이 증가
- 중국의 영유권 관련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근대 이후 가장 빈번하게 협상행위와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유권에 대하여 활발하게 압력과 교섭행위를 적용
 - 전통적인 의미에서 중국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과 군사적 충돌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적극적이며 도발적인 행위양식을 보여줌.
 - 중국이 상대국가인 경우보다 도전국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국경을 대치하던 베트남(프랑스)과 인도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 영유권 확보
 - 이에 반해 소련(러시아)과는 군사적 도발보다는 협상을 주된 정책으로 활용하여 영유권 문제에 대응
 - 상대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변화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도발적인 행위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냉전기와 탈냉전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남.

나. 일본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Huth and Allee 데이터는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지정하는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분석
 - 오류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외교적 노력도 있지만 일본의 영유권 문제 제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은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로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과격하게 반응한 경향이 오해를 일으킨 경향이 있음.
 -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단순한 표명에 대한 한국의 과격한 반응은 한일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없는 서양학자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한국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인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유발

-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해양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는 현대적 개념의 영토와 영유권 개념이 형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영토의 확장과 관련하여 전개
 - 일본이 도전국가로 영유권 분쟁을 유발한 사례는 전체 7건의 사례가 조사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패망하기 이전에 식민지 확장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들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 아래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은 한국과의 독도 그리고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으로 두 사례가 있음.
 - 러시아와의 쿠릴열도에 대한 분쟁은 종전 이후 일본이 국가체제를 정비한 195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군사적 대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29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전개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종전 이후인 195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상은 2회에 불과한 반면 군사적 대결이 3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소련)에 대한 대응과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냉전시기 군사적 강대국이었던 소련에 대해서 군사적 행위의 선택을 배제하고 협상에 주력
 - 국력이 열세에 있었던 한국에 대해서는 협상이 2회인 반면 군사적 행위를 3회에 걸쳐서 선택
 - 쿠릴열도와 독도 모두 상대국인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상국가이며 일본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일본의 접근은 다름.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해양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는 현대적
개념의 영토와 영유권
개념이 형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영토의 확장과
관련하여 전개**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분석의 대상기간인 1995년까지는 협상만 4차례 있었을 뿐이고 군사적 충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표 3〉 일본이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상대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57	한국	1951/1	1995/6	47	2	3
138	중국	1932/10	1937/7	9	2	7
139	프랑스	1938/10	1938/10	1	-	1
140	프랑스	1941/6	1941/6	1	-	1
141	몽고(몽골)	1935/6	1940/1	5	1	2
142	소련	1935/6	1944/10	11	3	-
143	소련(러시아)	1951/1	1995/10	50	29	-

- 일본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은 역사적으로 모두 4건의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 프랑스 및 미국과의 영유권 분쟁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종결
 - 일본이 상대국가로 현재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과의 사례
 -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의 부속도서로 강제로 할양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면 일본은 1895년 무인도를 선점하여 정식으로 편입하였다고 주장
 - 1895년 일본이 점유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까지 센카쿠 지역에 대한 영토갈등이 존재했는데 당시에는 협상이 6차례 그리고 군사적 행위가 2차례 발생

〈표 4〉 일본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15	중국	1919/1	1945/11	31	6	2
116	중국	1951/1	1995/7	46	4	-
126	프랑스	1939/1	1940/1	2	-	1
162	미국	1919/5	1920/11	3	2	-

-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분석의 대상기간인 1995년까지는 협상만 4차례 있었을 뿐이고 군사적 충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에 들어와서 센카쿠열도에서 중일 간의 갈등이 외교적 대립에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중국의 부상에 있음.

- 2010년 일본이 중국의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 당국은 관광교류의 중단, 희토류수출 중단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했고 일본이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한 사례에서처럼 중국의 대응 수위가 강경해짐.
 -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 (손기섭 2007, 449), 중국이 1990년대 전반 덩샤오핑 시절에는 ‘차세대 해결론’을 통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일본에게 외교적 항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개발을 시도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여 이른바 ‘전략적 호혜관계’에 합의하고 ‘힘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
 - 2012년 8월 일본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센카쿠에 상륙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
 - 홍콩의 시위대가 센카쿠 열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시위를 벌이는 등 민족감정의 문제로 비쳐졌지만 사실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447만 km²로 영토면적의 25배 더 큰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387만 km²인 점과 비교할 때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이 해양영토라는 개념이 없던 19세기 말부터 무인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팽창적인 정책을 전개하여(조선일보 2012년 5월 1일) 동아시아에서 해양을 지배하는 전략을 추진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핵심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중국의 도련선 확대라는 팽창전략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연근해중심에서 대양중심으로 해양방위전략을 전환
 - 미국의 일본-한국-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중국의 공세적 해상정책의 핵심 원인
- 일본의 영유권 관련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근대 이후 일본은 전략적인 움직임을 해왔음.
- 조사대상이 된 1932년 말부터 1945년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영유권 문제에 관한한 협상행위와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압력과 협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영유권을 확보
 - 전후에도 1950년에 압력과 협상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지만 이후 대부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상대방이 되는 사례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일본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인 경우는 러시아와의 북방도서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를
 - 일본의 대응은 군사적 갈등은 회피하고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전환

**전후에도 1950년에
압력과 협상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왔지만 이후
대부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상대방이 되는 사례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일본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인 경우는
러시아와의 북방도서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영토 및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했지만
주변국가와의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가 현상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정리**

- 일본의 전략적 전환은 영토 문제를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의지
 -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조치도 일면 현상유지를 포기하는 강경한 조치로 보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과격한 대응을 선택
 - 일본의 입장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과격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영유권 문제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발
 - 중국의 과격한 대응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거나 일본의 군비강화와 보통국가화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빌미로 활용
-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여 과격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이슈로 만들어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
 - 센카쿠와 독도에서 일본은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변경의 다른 입장에 있지만 상대방의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일관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용

다. 러시아

-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영토 및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했지만 주변국가와의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가 현상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정리
 -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경우는 대부분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극동지역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체감하는 영토 문제의 갈등은 아주 낮음.
-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영토 문제로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
 - 구한말 조선에 속했던 영토이나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령으로 전환되면서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
 - 녹둔도를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확인
 -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중소국경분쟁이 1960년대에 발생했지만 1991년 5월 중소국경협정으로 대부분의 영토 문제는 해결
- 러시아의 영유권 갈등의 대표적인 특징은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사례와 상대국가인 사례가 동등

-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의 빈도는 유사하지만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은 유럽, 발칸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었고 극동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음.
 -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경우, 영유권 분쟁은 유럽, 발칸, 중앙아시아 외에 동아시아에서도 발생
 -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사례에서나 대상국가인 사례에서나 협상과 더불어 군사적 분쟁에 못지않게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함.
- 최근에 지속되는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같은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 다시 말해 구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갈등
- 러시아 영토분쟁의 특징은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종결되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결정됨.
 - 폴란드의 경우 협상보다 군사적 충돌이 많았고, 핀란드의 경우는 협상과 군사적 수단이 각각 2회로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그루지야의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
-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니콜라이 1세 시대부터 흑해와 지중해 방면으로 진출해 농산물을 반출하는 통로와 19세기 후반부터 공산품의 해외 판로를 위한 통로의 확보가 주요 목적

〈표 5〉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상대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233	우크라이나	1992/4	1995/1	4	4	-
236	핀란드	1919/10	1920/5	2	2	-
237	폴란드	1919/2	1921/1	3	1	2
238	루마니아	1920/10	1940/6	21	3	1
239	루마니아	1941/1	1943/12	3	-	1
240	에스토니아	1939/3	1940/6	2	-	2
241	핀란드	1938/4	1940/9	4	2	2
242	라트비아	1939/9	1940/6	2	-	2
243	리투아니아	1939/10	1940/5	2	-	2
321	아제르바이잔	1994/2	1995/7	3	2	-
322	그루지야	1993/1	1995/12	4	2	1
333	그루지야	1920/6	1921/2	2	-	2
334	이란	1919/1	1957/4	38	7	-
335	터키(오토만제국)	1945/6	1953/5	10	1	2

최근에 지속되는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같은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 다시 말해 구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갈등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의 경우 근동, 중앙아시아, 유럽에 분포하는 분쟁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하여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95년까지 지속되는 갈등은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일본과의 북방도서 문제가 있음

- 크림전쟁을 통해 진출을 기도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저지당했고 이후 러시아는 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남진정책을 추구
 - 러시아의 남진정책의 그림자로 오스만 투르크가 15세기 이래 지배해오던 발칸지역에 복잡한 국제 분쟁이 발생
 -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발칸지역의 영토분쟁은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일단락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은 독립국가연합에 국한
-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의 경우 근동, 중앙아시아, 유럽에 분포하는 분쟁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하여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95년까지 지속되는 갈등은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일본과의 북방도서 문제가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1969년 우수리 강에서 누적된 군사적 충돌이 국경전쟁으로 발전하는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었지만(서상문 2013, 494-495), 탈냉전이 본격화된 1991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에 중점을 두면서 러·중 국경확정에 합의
 - 2001년에 양국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2004년에는 “동부 국경에 대한 추가 협의문”을 타결함으로써 러·중 간에는 국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 합의

〈표 6〉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03	아프가니스탄	1919/10	1946/1	29	10	1
123	중국	1919/7	1995/12	81	31	4
124	중국	1948/3	1995/10	10	3	-
142	일본	1935/6	1944/10	11	3	-
143	일본	1951/1	1995/10	50	29	-
185	에스토니아	1992/5	1995/8	3	3	-
186	핀란드	1919/5	1919/5	1	-	1
197	핀란드	1941/7	1946/8	3	1	1
218	라트비아	1994/1	1995/1	2	-	-
228	폴란드	1919/2	1921/1	3	1	2
231	루마니아	1919/3	1920/11	4	2	-
294	이란	1919/1	1957/4	32	7	-
341	터키(오토만제국)	1921/1	1921/1	1	1	-
345	터키(오토만제국)	1921/3	1921/3	1	-	1

-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과의 쿠릴열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본질적으로 외교적 문제로 남아 있음.
- 북방도서에 대한 분쟁은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강점했다가 2차 대전 패배로 러시아가 재점유한 북쪽 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등 4개 섬에 대해 일본이 돌려줄 것을 요구
 - 러시아는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러시아가 반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 전개
 - 협상과정에 러시아의 단계적 반환에 대하여 일본의 동시 반환이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러시아는 입장을 선회하여 반환계획 자체를 폐기
 - 현재까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아투루프 섬을 제외한 나머지 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분쟁은 지속
-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빈도는 낮지만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는 행위 유형은 협상과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하면서 문제를 처리
 - 러시아와 중국의 유사한 행위 패턴은 강대국으로서 주변의 약소국과의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전략
 -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정치지도자의 일방적인 타협, 영토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원칙의 적용, 그리고 정치적 합의에 의한 영토 문제의 해결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윤태룡 2012).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1951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총 47회의 영토분쟁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는데, 일관되게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설정하는 사실관계의 착오 발견

라. 한국

- 한국이 관련된 영유권 분쟁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관련 자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1951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총 47회의 영토분쟁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는데, 일관되게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설정하는 사실관계의 착오 발견
 - 본 연구에 이용된 Huth and Allee의 자료가 영유권 분쟁에 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영토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 왜곡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한일관계에서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표시한 것을 일본을 도전국가로 그리고 한국을 상대국가로 수정하여 협상과 군사적 충돌의 패턴을 표시

〈표 7〉 한국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46	북한	1948/1	1995/4	53	20	7
157	일본	1951/1	1995/6	47	2	3

한국과 중국 사이에**새로운 문제로****부상하는 이어도****영유권 문제는 1995년****한국이 태풍·해일 등****해양 및 기상 현상의****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종합해양과학기지가****건설되면서 시작**

-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착오를 제외하면 한국이 상대국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도전국국의 지위를 가지는 사례는 전무
 - 한국과 일본 사이의 47회의 영토분쟁 중에서 협상으로 귀결된 사례가 2회로 1952년 1월과 1965년 1월로 조사
 - 1952년은 한국전쟁 중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이 있었고 1965년은 한일어업조약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음.
 - 조사기간 중 발생한 군사적 분쟁행위로 귀결된 사례는 1953년 6월, 1954년 6월, 그리고 1978년 5월의 3회로 나타남.
- 한국을 대상국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남북한 간의 영유권분쟁으로 1948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 53회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북한이 도전국가로 남한을 상대국가로 표시
 - 남북관계에서 협상으로 귀결된 사례는 22회, 그리고 군사적 행위로 귀결된 사례는 10회로 조사
 -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NLL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발생되었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
-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는 1995년 한국이 태풍·해일 등 해양 및 기상 현상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시작
 - Huth and Allee의 자료에는 이어도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어도는 기준 수면에서 4.6미터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라는 점에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님.
 -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해양 관할권 분쟁의 잠재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놓고 분쟁의 조짐이 증가
 - 한국이 주변국가에 대하여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점은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를 처리하는 전략에 반영되어야 함.
 - 이어도 문제가 안고 있는 분쟁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차원에서도 중국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대안이 필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NLL에 관련한 분명한 의지가 요구됨.

5. 결론

- 우리 국민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전략적 움직임에 우리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함.
-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일축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도 사실은 국제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제법을 이용한 정치적 및 전략적 접근
-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제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적 접근을 거부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의 선택
- 본 연구의 목표는 독도 문제의 객관화에 있음.
 - 객관화라고 하여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독도 문제를 이해
 -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발견한 세부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 자료인 Huth and Allee의 자료에 따르면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지배를 하는 대상국가(target)와 도전국가(challenger)의 관계에 오류가 있음.
 - 하나의 오류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대변하는 사례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오류의 근저에 일본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과민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도전국가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영토 문제 관련 대응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

**우리 국민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전략적 움직임에
우리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함**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호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많고
한국과 이익의
충돌이 없는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함**

- 1919년부터 1995년까지 75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영토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양식이 명확하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는 주변국의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 바가 없었지만, 주변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은 주변국을 상대로 상당히 빈번한 협상과 군사적 대응을 실행해 왔으며 그 행위양식이 다분히 상호호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
 -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분쟁을 사실상 종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토 문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탈냉전 이후에도 주변국가인 러시아,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영유권 분쟁을 지속적으로 제기
 - 중국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영유권과 관련하여 주변국에 대한 도전의 사례가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지만 한국과 직접적인 분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이익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주변국의 행위 양식을 확인하는 과정에 한국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협력의 파트너로 우선 고려해야 할 전략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립
-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호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많고 한국과 이익의 충돌이 없는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함.
 -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도전국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동의, 합의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전략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외교전략
 - 일본은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대상국가의 지위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도전국가의 지위에서는 현상변경의 명분을 강조하는 이중전략을 채택
 - 일본의 국제법에 의존하는 현상변경전략과 실효적 지배에 의존하는 현상유지전략의 동시 활용이라는 이중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원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이른바 1국 1원칙의 규범을 확대·강화

주석

- 1) 본 주장이 독도에 대하여 한국 측이 제시하는 지도와 역사서의 내용이 효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도 한국의 반응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로 효과적이지만 국제적으로 기초조사에 근거한 독도의 영유권 확보라는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접근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llee, Todd L. and Paul K. Huth, 2006, "Legitimizing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s Domestic Political Cov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0, No.2, pp.219-234.
- Carter, David B., 2010, "The Strategy of Territori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4, No.4, pp.969-987.
- Hensel, Paul R., 2001,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 No.1, pp.81-109.
- Hensel, Paul R., and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Thomas E. Sowers II, 2008, "Bones of Contention: Comparing Territorial, Maritime, and River Issu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2, No.1, pp.117-143.
- Huth, Paul K. and Todd L., Allee, 2003,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der, Toby J., 2009, "Understanding Arms Race Onset: Rivalry, Threat, and Territorial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s*, Vol.71, No.2, pp.693-703.
- Senese, Paul D., 2005, "Territory, Contiguity, and International Conflict: Assessing a New Joint Explan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9, No.4, pp.769-779.
- 김영수, 2008,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pp.113-130.
- 김자영, 2011,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34권, pp.1063-1108.
- 김태준, 2008,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78권, pp.189-219.
- 배진수, 2012, "세계영토분쟁의 흐름과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 『기독교사상』 통권 제646호, pp.34-46.
- 서상문, 2013,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손기섭, 2007,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권 3호, pp.447-470.

- 윤태룡, 2012,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
- 이극관, 2011,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의 비판—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2002)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7권 1호, pp.1-27.
- 이동률 외,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세련, 2010,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1권, pp.231-253.
- 최병학, 2010,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권 2호, pp.217-241.
- 최희식, 2010,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JPI 정책포럼』 52권, pp.1-16.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JPI정책포럼 현황

- 조태열·진행남·정재욱·이성우 『신뢰외교 구축과 안보협력의 미래』
(No.2014-09/10/11)
- 김태환·이신화·신범식·장노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No.2014-06/07/08)
- 이성우·이상현·전재성·진행남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No.2014-03/04/05)
- 하인즈 가트너·서동주·허태희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미러관계:
특징과 전망』 (No.2014-01/02)
- 배궁찬·경제희·이정우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No. 2013-17/18/19)
- 신각수·김성한·서창록·조정현·신부남 『한국외교의 방향과 현안』
(No. 2013-13/14/15)
- 조양현·신정화·고봉준 『일본과 동북아 안보』 (No. 2013-9/16)
- 주철기·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 2013-11)
- 유현석·이성우·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 2013-10/12)
- 진행남·한인택·황일도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06/07/08)
-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No. 2013-04)
-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3-03)

A Case of the Settlement of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Russia: Its Significance for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YOON Tae-Ryoung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Recently,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new Cold War breaking out between the Western and Eastern Bloc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USA's current strategy of rebalancing toward Asia and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China and Russia. That, along with the currently deepen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casts a dark shadow over the prospects for stability in the region. Nonetheless,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Russia, which had lasted for more than 300 years, is worth looking back on as the basis for a ray of hope for East Asian countries entangled in similar disputes.

There is no such thing as inevitability in history or international politics. After all, it is people who make history, although they are restricted by the environment (structure) formed by earlier history. National leaders are not people wh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s a robot would, but are rather persons with the power to influence events and transform a dismal reality for the better by pushing ahead with the necessary policies with resolve and commitment.

That said, the future of East Asia very much depends on the types of leaders elected by the people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always form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rather than by extremes of people and structure (or determination and determinism). The abovementioned case involving China and Russia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achieve regional peace in East Asia, provided that the politicians who are intent on inciting nationalistic fervor are removed from the equation and replaced by those who can apply the lessons of history to reality with adequate vision and capability.

60 Years of Maintaining the Five Principles for Peaceful Coexistence: Are China and Myanmar Capable of Brotherly Relations?

JANG Jun Young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Hufs)

Prior to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South Korea this year, China held a meeting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in 1954), inviting Indian Vice President Mohammad Hamid Ansari and Myanmar President Thein Sein to attend. The tripartite meeting was the first top-tier summit to be held over a joint agenda since Mr. Xi Jinping's inauguration as China's president.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reached an agreement to the effect that they would jointly cope with supranational crime and terrorism, including narcotic/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five principles. However, what was really on the minds of the three leaders appeared to differ markedly.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reached an agreement to the effect that they would jointly cope with supranational crime and terrorism, including narcotic/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five principles. However, what was really on the minds of the three leaders appeared to differ markedly.

Following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Myanmar in 2011, Chinese leader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maintain or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with Myanmar. However, Myanmar's new government attempted to shed its image as a vassal state of China by prioritizing political freedom over the economy and reflecting anti-Chinese sentiment in its realpolitik. Moreover, it succeeded in mitigating the sanctions that Western countries had imposed upon the country due to the previous military dictatorship, by striving to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m. It also obtai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its status as a legitimate government.

Having failed to cope with changes in Myanmar's political situation, China saw the need to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the country in the post-2011 period. In 2014, China is trying to adopt a moderate policy toward Myanmar by presenting itself as a country that will offer opportunities to Myanmar and by dispelling fears that China poses a threat to Southeast Asia regarding the status of Myanmar as the chair of ASEAN in 2014.

As for India, which has succeeded in bringing about an internal power transfer in 2014, it sees the need to expand its influence eastward, using Myanmar as a bridge. In the event of its establishment of friendly relations with Myanmar, India will be able to complete the economic corridor linking Southwest Asia with Southeast Asia, and eventually join the ranks of powers with the potential to persuade China to exercise restraint.

A Scientific Approach on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Behavioral Patterns of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YI Seong-Woo (Senior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 South Korea has endorsed the silent diplomacy in order to avoid Japanese strategic movement to make Dok-do as an international dispute area. However, Japanese government has adopted an aggressive strategy to extend its maritime territory including 4.47 million km² territorial water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s the 9th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Facing an aggressive neighbor country, I would like to review the international academic trend of studies on territorial disputes including issues, methodology, and perspectives.

This employs one of the most popular conflict data sets,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 by Huth and Allee and analyzes the conflictual behaviors of the relevant parties in 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Unlike the factual reality that South Korea has never claimed any territorial disputes as a challenger country, it is coded as a challenger country who tries to revise the territorial status quo. That is a result of misunderstanding that Japan effectively controls Dokdo.

As a conclusion of data analyses, this will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South Korea via the effective control on Dokdo. As a part of strategic approach, South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Russia who has no conflict of interest concerning the territorial issue in East Asia. Based on the initial cooperation, South Korea will be able to include China as another cooperation partner. Finally, South Korea can request the norm of "one nation-one rule" against Japanese political maneuvers concerning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Asia

3

Four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NIU Lin Jie (Shandong University)

6

A Case of the Settlement of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Russia: Its Significance for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YOON Tae-Ryoung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14

60 Years of Maintaining the Five Principles for Peaceful Coexistence: Are China and Myanmar Capable of Brotherly Relations?
JANG Jun Young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HUFS)

25

A Scientific Approach on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Behavioral Patterns of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YI Seong-Woo (Senior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